KWDI
해외통신

2021년 4월 (2021.4.1 ~ 4.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네덜란드 NETHERLANDS

네덜란드 스토킹 피해 관련제도 및 현황

곽 서 희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 작년 12월, 네덜란드 한 소도시에서는 26살 여성이 길거리에서 스토커에게 칼에 찔려 현장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언론이 주목한 바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하기 1주일 전 경찰에 연락했으며, 사건 당일 경찰서에 방문해 담당자와 만날 예정이었다. 경찰에게 신고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알던 사이였는데, 한동안 가해자에게 불쾌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네덜란드 법률상 스토킹 행위는 범죄로 명시되어 있다. 네덜란드 형법 285b항에 따르면 타인이 특정 행동을 하거나 못하게 강요하기 위해, 또는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 처벌 범위는 범죄 행위 빈도, 유형 및 강도에 따라 다양하며, 사회봉사 명령, 벌금형, 또는 최대 3년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 그리고 네덜란드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웹사이트 상에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체계적으로 요약한 매뉴얼을 만들어 게시하고 있다. 매뉴얼에서는 스토킹이란 무엇인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네덜란드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특히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스토커에게 공식 등기우편으로 스토킹 행위를 멈출 것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경찰이 이 과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와 대화를 멈추고 증거를 수집해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스토킹은 피해자의 공식 신고가 있어야 법적 절차를 밟고 기소할 수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신체적인 위협에 처한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자체 권한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검찰 측은 기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CBS (네덜란드 통계청) (2020.01.10), "Girls more likely to be harassed, stalked online," https://www.cbs.nl/en-gb/news/2020/02/girls-more-likely-to-be-harassed-stalked-online (접속일: 2021.04.26.)
- Politie (네덜란드 경찰 공식 웹사이트), "If you are being stalked: Information for victims of stalking," https://www.politie.nl/binaries/content/assets/politie/onderwerpen/slachtofferzorg/vertaalde-folders/19049-def-stalking-brochure-a5-eng-digi.pdf (접속일: 2021.04.26.)
- RTL Nieuws (2020.12.11), "Doodgestoken vrouw in Venlo werd al een tijd gestalkt," https://www.rtlnieuws.nl/nieuws/nederland/artikel/5202745/stalker-venlo-dodelijke-steekpartij (접속일: 2021.04.26.)
- Slachtoffer Hulp Nederland(2021), "Straf bij stalking," https://www.slachtofferhulp.nl/gebeurtenissen/stalking/straf-bij-stalking/ (접속일: 2021.04.26.)

- 만약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면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스토커가 위협적인 행위를 가하고 있으면 즉시 체포 및 구금하는데, 매뉴얼에서는 스토킹해왔다는 증거를 수집해 두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바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증거가 부족해 체포가 어려운 일도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행위 자체가 경찰 측 데이터에 남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장 체포가 어렵더라도 경찰은 가해자에게 접근하고 대화를 시도하여 스토킹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네덜란드 경찰 측은 대략 절반 이상의 스토킹 가해자들이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난 뒤 가해 행위를 멈춘다고 한다.

- 경찰 신고나 지원 요청 이외에도 여러 행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전화 및 소셜 미디어 접근 금지, 피해자 근처 특정 범위 내 접근 금지와 같은 행정 명령처분도 내릴 수 있다. 만약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살고 있고 스토킹 행위가 집 안에서 가정폭력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다. 이 경우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접근금지 명령은 관할 시장의 권한으로 집행되며 가해자는 같이 살던 공간에 머물 수 없고 10~18일간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받는다.

- 이 밖에도 경찰이나 정부에서 가정폭력이나 각종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기관인 Veilig Thuis에 연락하면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위급상황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가해자가 접근했을 때 바로 본인 위치 정보를 경찰에게 전송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누를 수 있는 버튼형 기기이다.

- 정부 관계당국의 도움 외에도 스토킹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정부단체들이 있다. 전국 각지에 위치한 여러 단체들은 유선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며,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제도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들은 웹사이트상에 스토킹을 명백한 범죄로 보고 피해자가 주저없이 연락하고 법적, 제도적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작년에 네덜란드 통계청(CBS)는 12-24세 약 3만8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보안 및 범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여성 청소년 중 3.1%가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청소년 응답자 0.8%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 중 2.8%가 온라인에서 성적(sexual)으로 불미스러운 피해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 역시 남성 청소년의 응답률은 0.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협박, 스토킹, 괴롭힘과 같은 사건의 피해를 경험한 남녀 응답자들의 43.4%는 불면, 분노 등 심적으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온라인으로 협박, 스토킹, 괴롭힘 등의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9%가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11.3%는 어쩌다 발생한 일이고, 7.5%는 피해를 경험한 본인 스스로를 탓하는 응답을 선택했다. 명백히 잘못된 범죄라고 응답한 사람은 4.1%에 불과했다. 그리고 피해를 경험한 이유 해당 사건을 알린 대상은 가족, 친구 또는 선생님인 경우가

36.7%로 가장 높았으며, 경찰이나 유관기관에 알린 경우는 8%에 그쳤다. 공식적으로 경찰에 범죄 피해로 접수한 경우는 매우 낮은 4.8%로 나타났다.

- 네덜란드에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스토킹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틀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통계상 스토킹이 범죄로 인식되고 피해자가 관계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스토킹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 관계당국이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이다.

독일 GERMANY

독일에서 '스토킹 범죄'는 어떻게 다뤄지나

채 혜 원 독일통신원

- 현재 독일 하노버 지방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독일 중부 데사우라는 도시에서 가해자는 피해 여성에게 고백했고, 피해자는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후 그는 몇 년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면서 하루에 200번 이상 전화를 걸고 소셜네트워크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어 여성을 모욕했다. 2020년 초, 가해자는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욕실에서 피해자를 찔러 죽였다.

- 독일에서 여성에 대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니더작센주에서는 2019년 이전보다 현재 더 많은 스토커가 법원에 의해 형을 선고받았다. 하노버 법무부는 지난해 총 43명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고 유죄 판결을 받은 43명 중 남성은 37명이었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 사건 중 피해자 16,432명이 여성이었고 남성은 3,772명이었다(2019년 기준).

- 독일에서 스토킹 행위는 2007년부터 독일 형법 238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상대의 생활 방식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자에게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스토킹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해당 된다. ▲상대에게 물리적인 (공간)근접성을 찾고 ▲통신 수단이나 기타 수단 또는 제 3자를 통해 접촉을 시도한 행위 ▲상대의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그 사람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거나 제 3자가 상대에게 연락하도록 유도한 경우 ▲상대의 생명, 신체 안전, 건강이나 자유 또는 상대 친척이나 상대와 가까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경우 ▲또는 다른 유사한 행위. 이와 함께 피해자나 피해자 친척 또는 가까운 사람을 사망 또는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에 빠뜨리면 3개월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어 상대나 상대 친척 또는 상대와 가까운 타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소 1년 최대 10년 징역에 처한다.

참고자료

- 독일 형법 238조,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_238.html (접속일: 2021.04.24)
- 독일 폭력방지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gewschg/BJNR351310001.html (검색:2021.04.24.)
- statista(2020.12.08.), "Frauen sind häufiger Opfer von Stalking", https://de.statista.com/infografik/5233/frauen-haeufiger-opfer-von-stalking (접속일: 2021.04.20.)
- 폭력 피해 여성 상담소 및 긴급전화 연합 브로셔, "WAS TUN BEI STALKING?", https://www.frauen-gegen-gewalt.de/de/infoflyer-fuer-betroffene-und-bezugspersonen/was-tun-bei-stalking-information-und-hilfe.html (접속일: 2021.04.20.)

- 독일의 폭력 방지법(Gewaltschutzgesetz)은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 친밀한 파트너, 지인 및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 의한 신체적 폭력, 위협 및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한다. 폭력방지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 건강 또는 자유를 고의로 해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법적 명령은 기한을 두며,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 집에 들어가거나 ▲피해자 집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 머무르거나 ▲피해자가 정기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장소를 방문하거나 ▲피해자와 접촉하기 위해 여러 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법원은 법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스토커가 피해자로부터 어느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접근금지명령이나 개인적으로 전화나 편지, 타인을 통해 접근할 수 없는 접촉금지명령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법적 보호명령은 담당 가정법원에 요청해야 한다.

- 독일에서 위와 같은 스토킹에 관한 처벌 법안은 2017년에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스토킹은 이제 '피해 입은 사람의 생활 방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전에는 그러한 침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공해야 했다. 예를 들어 법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피해자가 거주지를 강제로 옮기거나 일터를 바꿔야 했다.

- 지금도 독일에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아 고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 '폭력 피해 여성 상담소 및 긴급전화 연합(Bundesverband Frauenberatungsstellen und Frauennotrufe, 이하 BFF)'은 스토킹 범죄에 관한 자료집을 발행했다. bff 연합에는 180개 이상의 성폭력 위기 센터와 여성 상담 센터가 속해있으며, 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지원 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세미나와 콘퍼런스를 실시하고 실무 및 연구를 통해 관련 전문 지식을 전달한다.

- BFF의 발행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경우, 1)친구, 친척, 이웃에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권한다. 그래야 주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가해자가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다. 피해자 주변 이들도 스토커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2)가까운 상담 센터에 연락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얻는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안전 상황을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3)스토커에게 전화나 문자 또는 서면으로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직접 의사를 표한 증거를 남긴다. 가급적이면 등기 우편을 통한 서면 방법을 권한다.

- BFF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행동이 이어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1)우선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 후, 괴롭힘이나 위협에 대한 반응을 피하고 스토커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모든 스토킹 행동을 사진 등으로 문서화할 것을 권한다. 이것은 법적 절차에 중요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증인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3)증거 보존도 중요하다. 모든 채팅 메시지, 이메일, 편지, 문자 메시지 및 자동 응답기 메시지 등을 보관하고 날짜, 시간, 장소 등을 꼼꼼하게 기록한다. 이 기간에는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소포나 우편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4)추가 법적 조치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위협을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BFF는 특히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대처에 대해 따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스토킹은 메신저, 채팅 또는 기타 소셜 네트워크와 디지털 미디어, 이메일 등을 통해 스토킹하는 것으로 ▲페이스북(Facebook)이나 왓츠앱(Whatsapp) 등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지속적인 접촉▲인터넷과 직장 및 사회적 환경에서의 명예 훼손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등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 정보 게시 ▲신분 도용 등이 이에 속한다.

- BFF 자료를 보면, 디지털 미디어 확산으로 사이버 스토킹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 스마트폰에 앱을 몰래 설치해 채팅, 사진, 위치 등 여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하고 있다. 사이버 스토킹은 대부분 현재 또는 이전 파트너에 의해 벌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개인 정보 침해 행위는 모두 범죄다. bff 연합은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고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었는지 여부, 가장 적절한 접근 방식 및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상담 센터에 연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영국 UNITED KINGDOM

영국의 스토킹 피해 관련 법제도 및 현황

황 수 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에서는 2016년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한 20대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의심 범죄가 발생 시 경찰이 초기 개입을 허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담은 스토킹 보호법(Stalking Protection Act)가 2019년이 제정됐다.

- 본론에서는 먼저 스토킹 보호법 제정 배경과 법의 주요 내용, 해당 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스토킹 보호법에 포함된 스토킹 보호명령(Stalking Protection Orders)을 중심으로 경찰이 언제 어떻게 스토킹 의심 범죄에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경찰 권한 강화한 스토킹 보호법 (Stalking Protection Act) 제정

  ▶ 2019년 3월 15일 제정된 영국의 스토킹 보호법은 상대를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스토커를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범죄 피해가 발생해야 경찰이 개입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의심 사건에 경찰의 초기 개입이 가능해졌고 스토킹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보호 명령(protection)을 사용해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경찰의 보호 명령은 최대 2년까지 유효하며, 스토커가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형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참고자료

- Legislation.gov.uk (2019)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9/9/contents/enacted (접속일: 2021.04.27.)
- GOV.UK. (2021.01.) "Stalking Protection Orders, Statutory guideline for the poli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alking-protection-act-statutory-guidance-for-the-police (접속일: 2021.04.27.)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2020.01.20.) "Stalking Protection Orders",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stalking-protection-orders (접속일: 2021.0.27.)

▶ 이 법이 제정되기 전 영국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고 경찰의 초기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계기가 있었다. 2016년 10월 26세였던 앨리스 러글스는 헤어진 뒤 스토킹했던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었고, 가해자는 22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뒤 앨리스가 '전 남자친구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고 받은 경찰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초동 조치가 논란이 됐다. 2021년 4월 26일 페미사이드(femicide)를 중점적으로 보도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앨리스의 신고를 받고도 가해자를 만나거나 이야기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앨리스 가족은 딸의 이름을 따 'The Alice Ruggles Trust'라는 자선 단체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와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 BBC (2021.3.10.) "Stalking protection orders: Police 'not using' new powers to protect victims", https://www.bbc.com/news/uk-wales-56327375 (접속일: 2021.4.27.)
- The Guardian (2021.04.26.) "The UK's femicide epidemic: who's killing our daughter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1/apr/25/the-uks-femicide-epidemic-whos-killing-our-daughters (접속일: 2021.04.27.)
- Cambridgeshire Constabulary (2020.04.30.) "Cambridgeshire's first Stalking Protection Order granted", https://www.cambs.police.uk/news-and-appeals/cambridgeshires-first-stalking-protection-order-granted (접속일: 2021.04.27.)

경찰 스토킹 보호 명령, 과거 스토킹 범죄 혐의 없어도 경찰이 개입 가능

▶ 2019년 스토킹 보호법이 제정된 뒤 2020년 1월부터 경찰의 초기 개입을 허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 보호 명령 (Stalking Protection Orders)가 도입됐다. 영국 내무성(Home Office)가 2021년 1월 경찰을 대상으로 배포한 '스토킹 보호 명령, 경찰 개입을 위한 법적 지침 (Stalking Protection Orders, Statutory guidance for the police)'는 언제 어떻게 경찰이 스토킹 의심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내무성은 "경찰이 스토킹 보호 명령을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사용하고, 스토킹 행동에 숨겨진 동기를 파악해 스토킹이 다른 범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이 지침을 발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 영국에서 스토킹의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다. 하지만 영국 검찰(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에 따르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집착하는 행동을 지속해서 행하고,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이나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를 검찰과 경찰 모두 스토킹으로 인정한다.

▶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경찰은 스토킹 보호 명령을 사용하기 전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가해자가 스토킹을 하는지,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토킹 보호 명령을 사용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면 경찰은 법원에 스토킹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경찰이 스토킹 보호 명령을 사용할 때 피해자가 과거 스토킹 피해 경험이 없거나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기 전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 것이다.

▶ 임시 명령 (Interim Orders)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스토킹 보호 명령은 최대 2년까지 유효하고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명령(Full Orders)이라면, 임시 명령은 지속 기간은 짧지만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돼 경찰이 사건에 더 빨리 개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시 명령은 스토킹 피해 때문에 피해자의 목숨이 위태롭거나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면 경찰이 최대한 빨리 개입하기 위해 사용된다.

- 경찰 권한 강화한 보호 명령 승인 시 가해자는 소셜 미디어로도 피해자 접촉 불가

  - ▶ 법원이 보호 명령을 승인하면 스토킹 가해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금지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자주 방문하는 곳에 접근 금지 2)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등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 3)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 제3자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 금지 4) 소셜 미디어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금지 5) 가정법원을 포함한 법원에 피해자를 언급한 악의적인 소송 제기하는 것 금지 6) 피해자가 등장한 영상 녹화 금지 7) 인터넷 사용 내용을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치 사용 금지 8) 피해자 감시 금지

  - ▶ 이외에 가해자를 개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 심리 상담, 약물 알코올 중독 상담 치료, 범죄 예방 목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경찰이 강제할 수 있다.

  - ▶ 지난해 4월 30일 케임브리지셔 경찰은 스토킹 보호 명령 도입 이후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예를 공개했다. 이별 후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34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3개월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 영국 정부와 의회는 2019년 스토킹 보호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스토킹을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강화했다. 스토킹 보호법과 함께 도입된 스토킹 보호 명령에 따르면 과거 스토킹 피해 경험이 없거나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즉각적인 개입할 수 있는 임시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스토킹 보호 명령이 도입된 지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책정하기 어렵지만, 스토킹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